

Field Voice >>>

국정감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0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감에서는 수감기관들의 문제점과 비리가 불거지고 각종 이슈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달리 눈에 띄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수감기관장들의 다양한 태도는 많은 화제를 낳았다. 임인배 전 10월 19일 동시에 진행된 전기·가스 두 안전공사 국감에서 사장들의 상반된 수감태도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임인배 전 기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거침없는 행동으로 국감 파행을 이끌었다. 때문에 올해에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주변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국감에서는 성실하고 부드러운 답변으로 의원들과 취재진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감 도중에 의원들이 '불량한 태도'를 지적할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취재진들과 타 기관 관계자들이 퇴장이나 재국감을 우려할 정도였다. 이처럼 국감 기간은 수감기관장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슈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다. 3주에 걸쳐 진행된 국감은 수감 대상인 정부 부처와 각급 공공기관들에게는 힘든 시기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되고 각 언론사에게는 최고의 '취재거리'가 된다. 국감이 종료된 뒤 수감기관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언론인들은 아쉬움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다. 벌써부터 내년도 국감이 기다려진다.

정당한 대가

일을 했으면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기감리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환영할만한 일이 생겼다. 내년부터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전기감리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대가만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왜 환영하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본래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전기감리비를 산출해 왔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전기감리 용역비가 책정됐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전기감리 용역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대가에 비해 적었던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때문에 공공이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대가를 제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피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개정돼 전력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공공이 발주하는 감리용역을 수주하려는 업체들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가슴 아픈 참사

최근 도심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행당동 CNG 버스 연료통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10월에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수상복합건물인 우신 골든스위트에서 큰 불이 나기도 했다. 현대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의 원인이 누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최근에 발생한 가장 큰 재해들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와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전기 및 에너지 관계자들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CNG버스 연료통 폭발로 젊은 여성 한명이 양 발목에 큰 부상을 입는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변 상가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로는 55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CNG 버스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사는 이들은 '혹시 우리 집도?'라는 생각에 마음 졸이는 등 각종 후유증이 발생했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으로 느껴질 뿐이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전기·가스·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안전에 더욱 힘쓰고 대책마련에 나선다면 앞으로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